

브라질 유한책임회사(Ltda.)의 개관 - 설립, 운영 및 청산 -

정보신청기관 : 현대 · 기아자동차

1. 들어가면서

브라질에 투자를 결정하는 외국기업이 회사 설립이나 인수 때 고민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어떤 법인 형태가 가장 유리한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아직 브라질 시장에 대해 확신이 안선 기업은 일반적으로 브라질에 현지법인을 통해 진출하기 전에 연락사무소나 지점 또는 지사를 통해 현지시장을 관리할 생각을 한다. 그러나 브라질의 경우 이러한 사무소(office)나 지사(branch)의 설립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립 후에도 관리유지가 어렵다. 한편,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주식회사(corporate)의 경우는 브라질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의 상법에서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엄격주의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브라질은 주식회사법에서 그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해 아주 엄격한 규제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식회사를 설립하지 않는다.

브라질에서 가장 선호되는 법인 형태는 바로 유한책임회사(Sociedade por Quotas de Responsabilidade Limitada: 이하 Ltda.)이다. 회사의 자율권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합명회사의 장점과 사원의 책임을 출자금으로 한정하는 주식회사의 장점을 모아서 결합한 점에서 보면 한국의 유한회사(limited company, 약자로 Co., Ltd.)와 유사하다. Ltda.는 일반적으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적합하지만 상장기업의 수가 많지 않고 가족기업이 많은 브라질의 경우 대기업들도 외부규제가 심한 주식회사보다 Ltda.를 선호한다. 그래서 Ltda.는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브라질에 진출하는 외국투자자들도 가장 선호하는 기업형태로 전체법인의 90% 이상이 Ltda.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투자법인의 형태는 투자 목적에 따라 본국과 투자유치국의 관계법을 모두 검토하고, 설립 및 운영과 조세 · 노동 · 과실 · 송금 · 재판관할 등 투자에 관련된 실체법과 절차법상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¹⁾

이하에서는 브라질법상 Ltda.의 설립과 운영 및 청산제도 등에 관해 어떠한 규정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브라질법상 법인의 종류

전통적으로 브라질 법은 법인을 상법과 민법으로 나누어 규율하여 왔다. 대부분의 법인은 상법에서 규율했고 민법에서는 민법상의 유한책임회사(Ltda. S/C)를 규율했었다. 그리고 별도로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법’이 있어 Ltda.를 규율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새롭게 제정된 신민법전²⁾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규율하고 있다. 즉, 456조문으로 구성되었던 상법 제1편을 완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신민법전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상법은 더 이상 육상에서의 상행위를 규율하지 않게 되었고, 제2편 해상행위만 규율하게 되었다. 신민법전은 법인에 관한 구분도 과거 민사법인(Pessoa jurídica de direito civil)과 상사법인(Pessoa jurídica de direito comercial)이라는 형식적인 분류방식을 지양하고, 생산·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상(atividades comerciais)의 법인이면 모두 사업법인(sociedades mercantis ou comerciais)으로 규정하는 실질적 구분방

식을 택했다.

그리고 신민법전은 구민법전과 달리 “법인격 부인론(piercing the corporate veil theory)”을 도입하여 회사의 지주(sócios; partners)가 회사 목적을 무시하고 법인격을 남용했거나 지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을 구분하기 어렵도록 고의적으로 행동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주의 재산도 차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

이제 법인의 종류를 알아보자. 브라질 신민법은 법인(sociedade)을 ‘비인격법인(sociedades não-personificadas)’과 ‘인격법인(sociedades personificadas)’으로 구분한다. ‘비인격법인’이란 법인격이 없는 법인(sociedade sem personalidade jurídica)을 말하며,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법인과 설립자를 구분하기 어렵다. 이에 해당되는 비인격법인으로는 공동법인(sociedade em comum), 참여법인(sociedade em conta de participação) 등이 있다. 공동법인이라 하자가 있는 법인, 사실상의 법인, 또는 아직 적법하게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법인을 통칭한다. 이러한 공동법인의 사원(발기인)은 법인의무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을 진다(민법 제990조). 참여법인(sociedade em conta de participação)이란 특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형성되지만 회사의 형태를 갖추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법인체가 아니지만 납세의무를 진다. 구성을 위해서는 최소 1개 이상의 법



1) 조희문, 『브라질 비즈니스 진출 안내 백서』, KOTRA, 2002.

2) 브라질은 2002년 신민법전(New Civil Code)을 발표했다. 이전 민법전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을 가했기 때문에 단순히 민법 개정 또는 개정민법전이라는 표현대신 신민법전(Novo Código Civil)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인이나 개인의 참여가 필요하며, 반드시 3자 앞에 나타나지 않는 은닉된 파트너(sócio oculto)가 있으며, 그룹의 대표파트너(sócio ostensivo)가 회사를 대표하여 활동한다(민법 제991조). 그래서 동 회사재정은 회사에 참여하는 한 파트너의 회사장부에 기록되는 참여장부(Conta de participação)일 뿐이다.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Joint Venture Partnership에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특수한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되지만 지속적으로 존속해도 무방하다.

‘인격법인(sociedades personificadas)’이란 법인격이 있는 법인을 말하며, 이 범주에 속하는 법인은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 법인의 파트너(sócios)와 구분된다. 이 범주에는 단순법인(sociedades simples), 협동조합(cooperativas) 및 기업법인(sociedades empresariais) 등이 있다. 단순법인(sociedades simples)이란 설계사무소나 회계사무소처럼 전문직이나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는 자들이 설립하는 법인이 이에 해당되며, 과거 민법상의 회사(sociedades civis)를 말한다(민법 제997조). 단순법인은 기업법인의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다(민법 제983조). 협동조합(cooperativas)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조합원이나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 협회(associação), 조합 등을 말하며, 활동분야에 대한 제한은 없다. 협동조합은 연방법 제5764호(1971.12.16.)로 규율되고 있으며 그 목적에 관계없이 항상 단순법인(sociedades simples)의 형태로 구성된다(민법 제982호, 단독항). 협회(associação)는 문화, 종교, 스포츠, 교양 등 경제적

인 목적을 하지 않고 구성원을 위해 형성된 인적 조합을 의미한다.

기업법인(sociedades empresariais)은 생산, 유통 및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조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법인을 통칭한다. 여기에는 산업, 상업 및 서비스분야가 모두 포함되며(민법 제966조), 농촌활동도 포함된다(민법 제971조). 동 범주에는 유한책임회사(sociedade limitada), 주식회사(sociedade anônima, companhia), 합명회사(sociedade em nome coletivo), sociedade em comandita simples, sociedade em comandita por ações 등이 포함된다. 합명회사(Sociedade em Nome Coletivo)는 영리를 목적으로 구성되는 회사 형태이다. 2인 이상의 파트너가 회사의 운영에 직접 참여해야 하며, 각 파트너는 회사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 제한적 참여회사(Sociedade em Comandita Simples)는 2인 이상의 파트너로 구성하되 적극적 파트너와 제한적 파트너로 구분된다는 점이다. 융합적 참여회사(Sociedade em Comandita por Ações)의 특징은 2인 이상의 파트너로 구성하되, 최소한 1인은 실무담당으로 무한책임을 지고, 또 다른 1인은 참여자금의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점이다. 기타 유한책임회사(Sociedade por Quotas de Responsabilidade Limitada, Ltda.)와 주식회사(Sociedade Anônima, 이하 S.A.)가 있다.

3. Ltda.의 법적 특징과 관련법률

Ltda.는 주식회사(S.A.)와 함께 브라질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인 형태이다. 그런데 신민법전의 도입으로 Ltda.는 전에 비해 더 복잡해졌고 갈수록 주식회사에 더 접근해 가고 있다. 특히, 신민법은 Ltda.의 설립정관이 주식회사법³⁾을 부수적 법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양 법인 형태는 점차 접근해 가고 있다. 브라질의 Ltda.는 자본출자가들의 개성이 회사구성과 운영에 크게 반영되기 때문에 합명회사의 색채가 짙다. 회사사항의 결정에 있어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제가 적용된다. 반면, Ltda.는 주식회사의 장점도 갖고 있다. 자본출자가의 책임은 자신이 출자하기로 약속한 출자금에 대해서만 책임이 한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자가는 출자액에 비례하여 지분(Quota)을 분배받는다. 이러한 출자가의 유한책임성 때문에 제3자는 지주의 신용에 기초하여 Ltda.와 거래해서는 안 되며, 회사재산과 신용에 기초하여 거래를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Ltda.는 회사설립정관(Contrato Social, bylaws)의 등기, 즉 본점의 주소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 설립을 완료하고 법인격을 취득한다. Ltda.는 외국기업이 전액출자 현지법인(wholly owned subsidiaries)을 원할 때, 소수투자자간의

합작투자를 원할 때, 회사경영의 대외노출을 꺼릴 때, 초기운영자금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경우 등 주로 투자자들 간에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긴밀한 투자·경영관계가 있을 때 사용하기 좋은 기업 형태이다.

Ltda.는 신민법전 이전에는 “Ltda.의 설립에 관한 법”⁴⁾이 규율했으나 신민법전은 동법을 폐지하고 신민법전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주식회사법으로 보완하도록 하고 있어 Ltda. 설립에 관심 있는 한국회사들은 신민법과 주식회사법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Ltda.가 처음 브라질 법에 나타난 것은 1865년 José Thomaz Nabuco de Araújo가 발의한 법안에서였다. 동 법안은 브라질 정부에 의해 거부되었다. 뒤이어 1912년에 Herculano Marcos Inglez de Souza가 제출한 상법전안(Projeto de Código Comercial)에 Ltda.(Sociedades por Quotas de Responsabilidade Limitada)에 관한 규정이 한 장(Chapter)에 규정되어 있었다. 동 법안은 당시 유럽에서 유행했던 입법 경향과 브라질 상인들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했었다. 그러나 이후 Joaquim Luiz Osório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통해서 겨우 브라질 법률 질서에 포함되게 되는데, 이것이 1919년 ‘Ltda.에 관한 법률’인 대통령령 제3708호의 단서가 되었다. 동 대통령령이 브라질 최초이자 전 세계에서



3) 주식회사법 (Lei de Sociedade Anonima), 법률 제6404호 (1976.12.15.)

4) 대통령령 제3708호 (1919.1.10.). 원명은 Decreto n.º 3.708, de 10 de janeiro de 1919, que regula a constituição de sociedades por quotas de responsabilidade.

유한회사(Sociedades Limitadas)에 관한 법으로
는 5번째가 된다. 이러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
더라도 1919년 제정된 유한책임회사법은 지난
84년 동안 브라질에 설립된 기업들의 약 90% 이
상을 규율하는 아주 중요한 법률의 역할을 수행
해 왔다. 동 법률은 2003년 신민법전의 발효와
함께 폐지되었다.

현재, Ltda.에 적용되는 법률은 신민법전(법
률 제10406호)⁵⁾이다. 동 법률은 Ltda.형태에 적
용되는 법규칙을 이전의 18개 조항에서 35개
조문(제1052조 - 제1087조)으로 더욱 확장시켰
다. 또한, 단순기업(sociedade simples)에 적용
되는 41개 조문도 Ltda.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Ltda. 설립정관에서 주식회사법(Lei de S.A., Lei
6.404/76)의 적용을 보충법률로 명기하지 않는
경우에 부수적 법률로 적용된다.

4. 정관작성과 회사 설립절차

Ltda.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회사 구성원이 있어야 한다, 브라질법이 1인 회
사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100% 외
국인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지인이나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한국
진출기업은 100% 단독투자를 할 수 있다. 이 경
우 다음과 같은 지주 구성이 가능하다. (1) 둘 또

는 그 이상의 법인 (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법인
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개인투자가 (3) 둘 또는
그 이상의 개인투자가.

한국기업이 단독투자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가급적 개인보다는 그룹 내의 계열회사가 상징
적인 투자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
의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다면 개인을 선정할 경
우 해당인이 전근하거나 퇴직하거나 사망시 일
일이 정관을 바꾸어야 하며 또한, 법인과의 경제
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법인
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물론, 합작투자
의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상대 투자가가 법인일 수도 개인일 수도 있다.

한편, Ltda.는 주식회사와 유사하게 자본과 경
영이 분리된다는 사실을 재인식해야 한다. 물론,
일반적으로 지주가 회사운영을 하지만 해외부
채지주의 경우에는 영주권자 이상의 자격을 가
진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권리행사를 하
게 된다. 또한, 브라질의 외국인법상 회사운영
은 브라질 거주인(영주권자 이상)이 해야 한다
는 법적 제약 때문에 만일, 외국투자기업에서
Ltda. 경영인을 파견하려면 파견외국인이 영주
권을 신청하거나 영주권자를 경영인으로 지정
해야 한다.

신민법에서는 소액지주의 보호 외에도 다수
결을 통해 소액지주를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 장
치를 했다. 예를 들어, 소액지주가 회사활동에



5) novo Código Civil brasileiro, Lei 10.406/2002, Título II do Livro II da Parte Especial – Do Direito de Empresa.

위험을 주거나 정관에서 정당사유로 소액지주의 퇴출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지주들은 정관개정을 통해 다수결로 소액지주를 퇴출시킬 수 있다.

Ltda.의 설립등기는 주식회사에 비해 대단히 수월하다. 설립정관을 작성하여 해당주의 상업등기소(junta comercial, 상파울루의 경우에는 JUCESP)에 등록하면 된다. 설립정관을 접수한 상업등기소는 정관의 내용을 심사한 후 하자가 없으면 정관을 등기하며 상업등기소가 직접 국세청에 법인납세번호(CGC)를 신청한다.

한편, 본국기업은 부채지주이기 때문에 설립등기를 위해서는 브라질에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부채지주의 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이유는 지주로서의 권한행사를 원활히 한다는 이유 외에도 브라질법원의 소환장 접수 등 해당기업의 지주로서 의무이행을 위한 법률행정의 편의라는 이유가 있다.

합작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자들 간에 투자합의서, 지주합의서 등 사전에 투자방식,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방대한 분량의 협상내용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최종적으로 Ltda.로 투자기업의 형태를 정했다고 한다면 투자합의내용에 따라 설립정관의 내용과 분량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설립정관은 이러한 투자자들의 투자합의 내용을 축약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Ltda.의 설립정관은 적게는 수페이지 분량에서 많게는 수십 페이지로 늘어날 수 있다.

설립정관의 작성은 법적으로 변호사의 고유업무이다. 설립정관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서명

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호사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설립정관의 작성을 변호사에 의뢰한다기 보다는 투자자의 미묘한 경제적 역학관계를 법문서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변호사에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 의뢰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설립정관도 일종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브라질 법에 준하여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완벽한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정관 작성은 단순한 법기술로 차치하지 말고 법예술로 보아 투자자 자신이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의 권리보호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정관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포르투갈어에 대한 해득력이 없으면 정관을 영어나 한국어 등 이해가 가능한 언어로 번역하여서라도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회사정관은 제3자에 대한 대항효력이 있기 때문에 정관내용을 벗어난 행위는 월권행위로 간주된다.

설립정관의 구성은 단순하다. 필수 기재사항인 민법 제997조의 내용을 집어넣고 나머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즉, (I) 지주에 관한 사항, 개인의 경우(성명, 국적, 혼인여부, 직업, 거주주소), 법인의 경우(회사명칭, 국적, 지주들의 본점), (II) 법인의 명칭, 목적, 주소, 설립기간, (III) 법인의 자본금(화폐로 산정가능한 현물도 가능), (IV) 자본금에서 각 지주의 지분과 납입방식, (V) 지주가 법인에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내용, (VI) 법인의 경영자(들)과 그 권한과 역할에 관한 사항, (VII) 각 지주의 법인의 이익금과 손실에 대한 참여방식, (VIII) 지주가 법인의 의무(채무)에 부수적으로 책임을 질

지의 여부 등이다.

정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별도의 합의서는 제3자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대항력이 없다(동조 단독항).

정관이 작성되면 설립지주들의 서명일로부터 30일 내에 법인 설립지의 법인민사등기소(Registro Civil das Pessoas Jurídicas)에 정관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제998조). 만일, 필수기재사항이 정관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상업등기소에서 설립조건의 하자를 이유로 설립등기를 거부하게 된다. 회사정관 (contrato social)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다. 즉, 상업등기소 (junta comercial)나 법인민사등기소 (registro civil de pessoas jurídicas)에 등기되어 있는 회사정관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다.

설립정관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형태로 구성된다. 제목, 서론, 필요조문, 결어의 순이다. 이중, 다음과 같은 조문은 설립정관에 기본적으로 삽입되어야 한다.

- (1) 회사명 (명칭에 회사 활동분야가 명시되어야 함)
- (2) 자본금, 지주지분, 자본금 납입 형태 및 완납기간
- (3) 본사의 주소
- (4) 회사의 설립 목적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밝힐 것
- (5) 지주들은 자본금에 대해서만 유한책임이 있음을 명시할 것
- (6) 회사의 존속기간 – 무한 또는 유한
- (7) 경영자(gerente) 또는 대리경영자(gerente-

delegado)의 지정

(8) 법정관할지

(9) 그리고 설립정관의 말미에는 계약 작성지와 작성일, 지주들의 이름과 서명, 증인 (최소 2인 이상)의 서명과 신분증번호 (발급기관 포함) 및 변호사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미세기업 (ME – microempresa) 또는 영세기업 (Empresa de Pequeno Porte – EPP)의 설립 시에는 변호사의 서명이 없어도 관계없다.

Ltda.의 경우에는 상호결정시 반드시 Limitada(유한)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Limitada라는 용어를 삽입해야만 지주가 유한책임자라는 것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Limitada라는 용어를 삽입하지 않으면 합명회사와 같은 이유로 지주경영인 (Sócios-Gerentes)은 법인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Ltda.에는 소위 산업지주(Sócios de Indústria)는 인정되지 않는다. 산업지주란 자본참여 대신 경영참여를 하는 지주를 의미한다.

5. 지분, 최저자본금 및 증자와 감자

Ltda. 설립을 위한 법정 최저자본금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만일, 한국기업이 본사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법인을 운영하려면 영주권을 소지해야 하며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연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소 5만 달러 또는 최

소 20만 달러 이상을 중앙은행에 외국인투자금으로 등록해야 한다.

회사자본금은 고정가치단위(fixed unit value)를 갖는 지분(quota)으로 환산하여 정관에 기재된다. 지분의 액면가치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거의 예외없이 지분의 액면가치는 등가가치를 사용하고 있다(제1055조). 예컨대, A와 B가 각각 15만 달러, 5만 달러씩 총 20만 달러의 자본금을 투자한다면 20만개의 지분(Quota)으로 나누어 A가 15만주, B가 5만주를 갖는 식이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지분 소유량은 회사정관에 의무적으로 기재되어 상업등기소에 등기되기 때문에 특별히 투자자에게 지분소지에 관한 확인증이 별도로 발행되지 않는다. 즉, 지분은 별도의 지분인증서나 지분증서로 발부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정관에 누가 지주이고 얼마만큼의 지분을 갖고 있는지 기재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정관 자체가 지주와 소유지분을 증명하는 증빙물이 된다.

자본금의 완납은 최대 5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완납할 때까지 모든 지주는 완납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제1055조, 제1항). 자본금은 현금 외에 현물이나 기술출연도 가능하나 서비스 제공은 인정되지 않는다(동조 제2항).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지주는 자신의 지분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지주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지주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양도는 전체 자본의 1/4 이상의 지주의 반대가 없는 경우 가능하다(제1057조). 지분양도는 정관에 기재되어 등록되는 순간부터 법인이나 제3

자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동조 단독항).

지주가 자기지분에 대한 자본완납을 하지 않고 탈퇴하는 경우, 다른 지주들은 탈퇴지주에 대해 이미 납입한 자금에서 채납이자와 정관에 규정된 납입분담금과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고, 해당 지분은 매입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제1058조). 지주는 자본금잠식이 있는 경우 정관에 허가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익배당이나 어떠한 명목의 배당도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법인에 반환해야 한다(제1059조).

한편, 지주의 책임은 소유지분의 가치만큼 제한되며, 만일, 회사자본금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 모든 지주들이 공동책임을 진다. 회사 설립자본금을 완납하게 되면 회사는 필요할 시 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다. 이때, 기존 지주들은 발행되는 신지분에 대한 우선매입권(pre-emptive rights)을 갖는다. 같은 맥락에서 회사는 보전이 어려운 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회사목적에 비해 지분금이 너무 큰 경우 자본금을 감자할 수도 있다.

6. 지주책임

지주(sócio)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전의 ‘Ltda. 법’이나 지금의 신민법상의 규정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Ltda.의 지주는 출자금(capital subscrito)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그 위상이 달라진다. 출자금이란 법인설립시 지주가 출자하기로 약속한 금액이다. 납입자본금(capi-

tal integralizado)이란 실제로 납입한 자본금을 말한다. Ltda.의 출자금은 당장해도 좋고 기간을 두고 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현물출자도 가능하다. 그러나 기간을 두고 출자하는 경우 반드시 설립정관(Contrato Social)에 그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신민법 제1052조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에서 각 지주의 책임은 자신의 지분액에 대해서만 한정된다. 그러나 모든 지주는 자본의 완납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⁶⁾ 동 조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주는 각자가 정관상에 납입을 약속한 지분을 기초로 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도 지주는 다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오로지 정관에 기재된 납입자본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만일, 법인이 진 채무가 완납한 자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미 Ltda.와 거래할 때 거래에 대한 위험률이 자본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자본금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주들은 연대책임(Responsabilidade Solidária)을 진다. 즉, 자신의

출자금액을 완납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주들이 출자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회사채무가 있는 경우 미납출자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자산이 모두 소진되어야 한다. 지주의 연대책임은 부수적 책임(responsabilização subsidiária)이기 때문이다. FÁBIO ULHOA COELHO교수는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완납의무이행에 관련된 지주의 책임은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법인자산이 있는 동안은 채권자의 권리만족을 위해 지주의 재산에 접근할 수 없다 (민법 제1024조, 민소법 제596조)”고 설명한다.⁷⁾

이와 관련하여 판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견지한다.

저당(담보) - 지주의 개인재산 - 유한책임회사의 채무 - 자본납입과 아직 납입 완료되지 않은 법인자산의 지정 - 유효한 제한 - 유한책임회사가 아직 자본완납이 되어 있지 않고 회사 채무를 변제할 법인재산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지주들의 재산에 대해 차압을 설정하는 것은 유효함 (상파울로주 고등법원 제1민사부)⁸⁾

문제는 최근의 추세가 지주의 부수적 연대책



6) “Na sociedade limitada, a responsabilidade de cada sócio é restrita ao valor de suas quotas, mas todos respondem solidariamente pela integralização do capital”.

7) “Jána responsabilização de sócio relacionada ao cumprimento do dever de integralizar o capital social da Limitada, vige a regra da subsidiariedade: enquanto houver patrimônio social, o do sócio não pode ser alcançado, na satisfação dos direitos dos credores (CC, art. 1,024; CPC, art. 596).”x. Coelho, Fábio Ulhoa “A Sociedade Limitada no Novo Código Civil”. São Paulo: Saraiva, 2003, p.11.

8) “PENHORA - Bens particulares de sócio - Dívida de sociedade por cotas de responsabilidade limitada - Integralização do capital e indicação de bens sociais não efetuadas - Constrição válida - (...). Válida a penhora que recai sobre os bens de sócios por dívida de sociedade por cotas de responsabilidade limitada se não houve integralização do capital, nem indicação de bens sociais que pudessem responder pela obrigação”(1ª TACivSP, RT, 682/123)

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이라는 점이다. 특히,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주의 경우 법인의 채무와 관련하여 갈수록 그 부담의 범위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법의 개정이나 판례동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전문경영인의 월권 또는 불법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경영권을 가진 지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우려는 경향이다. 법인채무에 대한 지주의 책임은 엄격히 보충적이지만 무한연대책임이라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법인재산이 소진되면 지주들의 개인재산이 법인의 잔여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이러한 무한책임의 조건이 아주 엄격해야 하나 갈수록 완화되는 경향이다.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정관에 위배하여 월권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불법행태로 행한 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만일, 이러한 불법적인 결정에 대해 반대한 지주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입장을 취했다는 점을 공식화해야 한다(민법 제1080조).

조세법, 사회보장법, 경쟁법과 노동법에서도 지주들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우는 경향이다. 비록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세무, 사회복지 부담금, 노동자 문제(법에는 명시규정이 없음)에 관해 판례는 회사채무가 발생할 경우 지주들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그리고 지주들이 무한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로 법인격부인론(*teoria da desconsideração da personalidade jurídica*)을 통해 경쟁법이나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채권자를 속이기 위한 재산분할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진다.

7. 회사운영

신민법은 Ltda. 운영과 관련하여 제1060조-1065조에 간단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tda.는 정관 또는 별도의 지주의결서(*ato separado*)에 의해 지명된 1인 또는 그 이상의 사람에 의해 운영된다(제1060조). 설립정관에서 모든 지주(*sócios*)에게 부여한 운영권의 경우는 나중에 지분취득으로 지주가 되는 자에게는 같은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제1060조, 단독항).

만일, 정관에서 지주가 아닌 자를 경영자(*administrador*)로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이러한 경영자의 지정은 자본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주의 만장일치로 승인받아야 하고, 자본이 완납된 경우에는 최소한 지주의 2/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1061조).

회사경영자가 정관이 아닌 별도의 지주의결(*ato separado*)을 통해 지명된 경우에는 회사경영회의록(*livro de atas da administração*)에 그 지명을 동의하는 서명을 함으로써 완성된다(제1062조). 만일, 지명일로부터 30일 내에 동의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 경영자 지명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제1062조 제1항). 경영자는 회의록에 서명한 후 10일 내에 관련 등록기관에 경영자 임명 사실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때 성명·국적·혼인여부·거주지·신분증·지명일과 그 증명서·임기 등을 적어내야 한다(제1062조 제2항).⁹⁾

경영인(*administrador*)은 지주들의 해임(*destituição*)결의를 통해 어느 때건 또는 임기종료를

통해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제1063조). 정관에서 임명된 경영인의 경우 그 해임은 정관에 다른 특별규정이 없다면 전체 지분의 최소 2/3의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제1063조 제1항). 그리고 경영인의 업무 종료는 이러한 해임 또는 업무 종료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유관기관에 등록을 함으로써 법적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제1063조 제2항). 만일, 경영인이 스스로 사임(renúncia)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관련해서 사임자가 서면으로 사임서를 회사에 정식으로 제출한 경우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제3자 관련해서는 유관기관에 등록(averbação)하고 이를 공표(publicação)한 후에야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제1063조 제3항).

회사 명칭이나 상호의 사용은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영인의 전속권에 속한다(제1064조). 즉, 경영인은 회사를 대표한다는 의미이다.

정관상에 정해진 회기(exercício social)를 마칠 때마다 자산현황, 재무제표와 경영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제1065조).

원칙적으로 지주(quotista)는 정관상 동일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누구나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지분을 투표권 있는 보통주와 투표권

없는 우선주로 분리하여 발행할 경우에는 지주도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성격에 따라 경영참여가 가능한 지주와 경영참여가 불가능한 지주로 분리할 수도 있다.¹⁰⁾ 위의 해당 법조문에서 보듯이 Ltda. 운영 관련하여 운영기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또한, 경영인(administrador)이란 표현을 사용했지, 이사(director)에 관한 규정이나 자격·인원·임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영조직에 관한 사항이나 명칭은 주식회사법을 준용하여 기업의 편의에 따라 구성하거나 인선이 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회사정관(Contrato Social; Articles of Association)에는 사장이나 이사 등 회사 경영권자가 누구인가를 지정하는데, 지주가 직접 회사 경영권을 갖는 Ltda.의 일반적인 성격상 특정 지주가 회사 경영자가 된다.¹¹⁾ 물론, 회사 경영권을 쥐고 있는 대지주가 결정할 경우 지주가 아닌 제3자, 즉 전문경영인을 회사 운영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¹²⁾ 지주는 회사 경영인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나 만일, 정관에서 지주를 경영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3를 대표하는 지주들의 결정을 통해서만 해임이 가능하다.



- 9) Ltda.는 회사 등록서류를 주(州) 상업등기소에 등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는 유관기관은 주상업등기소가 된다. 그 외에도 세무서 등 여러 유관기관에 해당업무와 관련한 등록을 하게 된다.
- 10) 민법에 규정은 없으나 주식회사법의 주식규정을 준용하여 Ltda.의 지분을 투표권이 있는 보통주와 투표권이 없는 우선주로 구분하여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일부 다툼은 있으나 학설과 판례의 다수적 입장이다.
- 11) 한국법에서 유한회사에 사용되는 사원은 Ltda.에서는 지주(quotista), 이사는 경영인(gerente) 또는 이사(diretor), 지분은 지분(quota), 사원총회는 지주총회 등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 12)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경우 본사가 대지주로 회사경영권을 갖고, 본사 직원을 법인장으로 임명하여 현지법인의 경영권을 위임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다.

그런데, 실무에 있어서는 회사 경영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약이 따른다. 민법상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외국인법 제99조에 외국인이 브라질에 설립된 회사를 운영하려면 영주권을 갖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문제가 된다. 동조에 따르면 임시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즉,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은 브라질에서 법인의 경영인, 중간관리인 또는 이사의 직이나 역할(cargo ou função de administrador, gerente ou diretor de sociedade comercial ou civil)을 할 수 없다.¹³⁾ 회사경영은 외국인 지주가 직접 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경영은 브라질에 거주하는 개인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주가 브라질에 영주권을 갖고 거주할 경우 직접 경영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브라질 거주인에게 경영권을 위임(delegate)할 수 있다. 지주경영인이 해외법인이거나 해외거주 외국인일 경우 브라질에 거주하는 1인 또는 그 이상의 개인에게 경영위임(Delegation of Management)을 통하여 경영권을 위임해야 한다.

한편, 회사 경영조직에 대해서는 정관상에 반드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회사경영은 지주가 공동으로, 또는 1인 또는 일부를 지주경영인으로 선정하여 경영이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회사 경영인은 Ltda. 설립 시 반드시 지

정되어야 하며 반드시 브라질 거주인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실무상으로는 지주경영인이 회사경영을 대리 경영할 경우에는 가급적 별도의 위임장을 통해 대리경영인을 선임하도록 정관상에 조치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대리경영인을 구체적으로 정관상에 명시한다면 대리경영인의 교체시마다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관상에 회사운영은 지주경영인이 경영하되 별도의 지주결의를 통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명시를 하면 정관 개정없이 필요시마다 지주결의를 통해 간단히 교체할 수 있다.

8. 감사

신민법은 Ltda.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와 같이 감사위원회(Conselho Fiscal)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감사에 관한 규정은 제1066조 - 제1070조까지 비교적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주의 총회권한을 훼손하지 않고 정관에 3인 또는 그 이상으로 구성되는 회계감사위원회(conselho fiscal)를 구성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감사는 지주 또는 지주가 아닌 브라질 거주자로



13) 법률 제6815/80호(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법). “Art. 99. Ao estrangeiro titular de visto temporário e ao que se encontre no Brasil na condição do artigo 21, §1º, é vedado estabelecer-se com firma individual, ou exercer cargo ou função de administrador, gerente ou diretor de sociedade comercial ou civil, bem como inscrever-se em entidade fiscalizadora do exercício de profissão regulamentada.”

서 제1078조에 규정된 연례총회에서 선임된다(제1066조). 제1011조 1항에 열거된 자는 감사로서 피선될 자격이 없을 뿐더러, 법인 또는 법인의 통제 하에 있는 어떠한 다른 법인의 기관에 있는 구성원들과 그 직원 또는 경영인들, 그리고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척들도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제1066조 제1항).¹⁴⁾

자본의 1/5 이상을 대표하는 소액지주들(sócios minoritários)은 최소한 1인의 감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제1066조 제2항). 감사는 감사로 선임되어 회의록과 감사위원회 회의록에 성명, 국적, 혼인여부, 주소, 선임일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면 다음 연례총회까지 감사직을 수행한다(제1067조). 감사선임 후 30일 내에 상기 회의록에 서명하지 않는 경우 선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제1067조 제1항).

감사의 보수는 감사를 선출한 지주총회에서 매년 결정된다(제1068조). 법률이나 정관에서 결정된 권한 외에도 감사는 단독 또는 합동으로 다음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제1069조).

- I. 최소한 3개월마다 법인의 장부와 서류, 재정 상태를 조사하고 경영인이나 청산인이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 II. 동 조문의 I항에 언급된 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의 회의 · 의견서장부에 기록한다.

III. 재무제표와 경영결과를 기초로 법인의 사업과 활동에 관한 의견서를 감사위원회의 회의 · 의견서장부에 기입하고 지주연례총회에 제출한다.

IV. 발견된 착오, 사기 또는 범죄를 고발하고, 법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한다.

V. 이사회(diretoria)가 연례총회를 30일 이상 지연시키는 경우 또는 중대하거나 긴급한(graves e urgentes) 동기가 발생하는 경우 지주회의를 소집한다.

VI. 법인의 청산기간 중에, 청산에 적용되는 특별규정 등을 고려하여 동 조문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수행한다.

법으로 감사위원회에 부여한 기능과 권한은 법인의 다른 기관에게 부여할 수 없으며, 그 구성원의 책임은 경영인의 책임과 같은 규정을 따른다(제1016조). 감사위원회는 지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를 주고 적법한 자격을 가진 회계사(contabilista)를 고용하여 회사장부, 재무제표, 영수증 등의 감사에 조력을 받을 수 있다(제1016조 단독항).



14) 제1011조 제1항. “특별법으로 금지된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공직수행이 금지되는 형벌에 처한 자, 또는 파산범죄, 부정부패죄, 뇌물죄, 강박, 공모 또는 대중경제에 반하는 범죄, 국가금융제도에 반하는 범죄, 경쟁법에 반하는 범죄, 소비에 관련하여 반하는 범죄, 공문서 위조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벌이 지속하는 동안은 법인의 경영인(administrador)이 될 수 없다.”

9. 총회

Ltda.에서 지주총회(Assembleia dos socios)는 지주의 총의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기관이며 Ltda.의 필요기관이다. 소집은 원칙적으로 지주만이 할 수 있으나, 감사도 필요한 경우에 소집권한이 있다(제1069조). 법인이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청산인이 소집권자가 된다.

신민법 하에서 지주들은 단순한 지주회의를 통해 지주들의 결정을 할 수도 있으나, 지주의 수가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 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주들이 만장일치로 회의의제를 서면을 통해 결정하는 경우 총회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신민법은 지주들이 의결해야 할 의제에 관해 정관상에 열거된 의제 외에도 민법상에 해당 의제의 정족수를 정해놓고 있어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

민법전에는 제1071조-제1080조에 지주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열거해 놓고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지주회의나 총회의 소집은 지주(sócio)나 감사위원회(conselho fiscal)가 할 수 있다(제1073조). 우선, 개별 지주는 경영인이 법이나 정관에 규정된 총회일이나 지주회의의 소집을 60일 이상 지연시키는 경우에, 또는 자본의 1/5 이상을 갖고 있는 지주가 의제를 지정하여 지주회의를 요청했으나 8일이 경과하도록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제1073조 제1항). 그리고 감사위원회(conselho fiscal)는 제1069조 제V호에서 규정하는 경우, 즉 “이사회(diretoria)

가 연례총회를 30일 이상 지연시키는 경우 또는 중대하거나 긴급한(graves e urgentes) 동기가 발생하는 경우” 지주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제1073조 제1항).

지주총회는 첫 번째 소집에서 회사 자본금의 최소 3/4 이상을 대표하는 지주들이 참석하는 경우에 개최된 것으로 보고,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2번째 소집의 경우에는 아무 숫자의 지주가 출석해도 개최된 것으로 본다(제1074조). 지주는 지주총회에서 다른 지주 또는 변호사를 통해 대리출석이 가능하나, 대리장에는 허가된 행위가 명시되어야 하며, 회의록과 함께 등록되어야 한다(제1074조 제1항).

지주들은 법이나 정관에 규정한 사항들 외에도 다음의 사항들은 지주들의 심의(deliberação)가 필요하다(제1071조).

이러한 사항들로는 (I) 운영회계의 승인 (II) 정관 이외의 별도 서면으로 경영인을 지명할 경우 (III) 경영인의 교체 (IV)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영인의 보수 (V) 정관의 변경 (VI) 법인의 병합, 합병, 해산 또는 해산의 중단 (VII) 청산인의 임명과 교체 및 (VIII) 법정관리의 신청 등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에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주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주심의회는 지주회의나 총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절차는 정관의 규정을 따라야 하고 법이나 정관에 규정한 경우에는 경영인이 소집해야 한다(제1072조). 지주의 숫자가 10명을 넘을 경우 지주심의회는 반드시 총회에서 이루

어저야 한다(제1072조 제1항). 지주총회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회기 종료 후 4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제1078조).

그리고 총회에서는 (I)경영진의 경영실적을 확인하고(tomar as contas dos administradores) 재무제표 등을 심의하고, (II)해당되는 경우 경영인을 지명하고, (III) 기타 상정된 의제를 논의하게 된다. 최소한 총회개최일 30일 전에는 (I)에서 언급하는 자료들이 회사경영에 참가하지 않는 다른 지주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며(동조 제1항), 총회에서 심의 후 표결에 붙이는데, 경영에 참여하는 지주들과, 해당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감사들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동조 제2항). 총회에서 경영실적과 재무제표의 유보없는 승인은 착오, 강박, 사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진 구성원의 책임과,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감사들의 책임을 면제시킨다(동조 제3항). 한편, 이러한 승인에 대한 무효권은 2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동조 제4항).

모든 지주들이 서면을 통해 총회의 장소와 소집일과 시간 및 의제를 알고 있다고 선언하는 경우에는 제1152조 제3항의 소집절차는 생략될 수 있다(제1072조 제2항). 만일, 모든 지주들이 지주회의나 총회의 의제에 대해 서면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을 생략할 수 있다(제1072조 제3항). 법정관리(제1071조 VIII)를 결정하는 경우,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경영인은 총자본의 1/2 이상을 소유한 지주의 동의를 얻어 예방적 법정관리(concordata preventiva)를 신청할 수 있다(제1072조 제4항).

법률과 정관에 따라 결정된 지주심의 결과는 결석이나 반대한 지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다(제1072조 제5항).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주회의에 총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제1072조 제6항).

지주총회의 의장과 서기는 참석 지주 중에서 선정된다(제1075조). 총회의 토의내용과 심의사항은 모두 총회회의록에 기록되며 총회회장단과 참석 지주의 서명을 받는다(동조 제1항). 회의록 사본은 경영인 또는 총회회장단의 확인서명을 받아 20일 내에 상업법인등기소(Registro Público de Empresas Mercantis)에 등기해야 한다(동조 제2항). 회의록 사본을 필요로 하는 지주는 동일사본(cópia autenticada)을 발급받을 수 있다(동조 제3항).

다음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제1076조는 의결정족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결정족수는 정관 작성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정 사항이다. 자본금의 3/4 이상을 필요로 하는 의결정족수로 제1071조의 (V) 정관의 변경과 (VI) 법인의 병합, 합병, 해산 또는 해산의 중단이 있고(동조 제I항), 자본금의 1/2 이상을 필요로 하는 의결정족수로(II) 정관 이외의 별도로 서면으로 경영인을 지명할 경우, (III) 경영인의 교체, (IV)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영인의 보수, (VIII) 법정관리의 신청이 있다(동조 제II항). 그리고 법이나 정관에서 별도의 가중다수결을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참석자의 단순과반수를 의결정족수로 한다(동조 제III항).

의제	정족수
정관의 변경	지분의 3/4
법인의 병합, 합병, 해산과 해산중단 (정관 이외 별도 서면으로) 경영인 의 선임	지분의 3/4 지분의 1/2 이상
경영인의 해임과 교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경영인 의 보수 결정	지분의 1/2 이상 지분의 1/2 이상
법정관리의 신청	지분의 1/2 이상
경영진의 경영실적	참석지주의 1/2 이상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 및 그 실적	참석지주의 1/2 이상
기타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참석지주의 1/2 이상

정관의 변경, 법인의 합병이나 다른 기업의 설립 또는 인수 등을 결정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지주는 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늦어도 회의 후 30일 내에 탈퇴권리를 행사해야 한다(제1077조).

지주회의(reuniões dos sócios)에서 정관에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지주총회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제1079조). 정관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지주의결에 대해서는 그 의결을 찬성한 지주들은 무한책임을 진다(제1080조). 즉, 지주간에 의견의 충돌이 있을 경우 소수 지주가 할 수 있는 최후 수단은 Ltda.를 탈퇴하는 것이다. Ltda.는 기본적으로 투자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인적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Ltda. 존립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즉, 지주간에 신뢰가 붕괴된다면 Ltda.를 해산하거나 지주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Ltda.는 물적회사이기 때문에 대지주의 보호를 우선으로 한다.

대지주가 기업해산을 원치 않는다면 결국 소지주가 대지주의 의견을 따르거나 Ltda.를 떠나는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형성된다. 소지주의 보호에 대해서는 판례 자체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Ltda.의 원칙이 이렇다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 운영 과정에서 경제적 이권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Ltda.의 경우에는 정관 작성시 이러한 회사운영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주가 Ltda.를 떠날 경우 즉, 소유지분을 매각하거나 양도할 경우에 잔존지주는 우선권(Priority)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우선권은 민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나, 가급적 정관상에 매각이나 양도에 대한 합의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10. 기업 형태의 전환

법인 형태의 전환(transformation)은 기업의 해산절차를 밟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정관상에 기업전환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 주주나 지주의 전원합의가 필요하다. 만일, 기업전환을 반대하는 주주나 지주가 있을 경우 반대자가 다수의결권이 없을 경우 기업을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법인 형태의 전환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 전략차원에서 고려된다. 외국기업의 경우 기업 관리가 수월한 Ltda.를 통해 투자사업을 시작했다가 추후 주식회사(S/A)로 전환하는 방식이 자주 이용된다. 그래서 만일, 합작투자의 형태로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 기업전환시 투자자들 간의 의견 대립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전환에 관한 의결방식을 사전에 정관상에 세세하게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이러한 규정의 이용성은 투자기업의 브라질에서의 사업 목표와 투자 형태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다.

11. 법인의 해산과 청산

법인의 해산(dissolução)에는 우호적 해산과 법정해산이 있다. 우호적 해산에 관해서는 민법 제1033조가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인의 해산은 다음의 경우에 가능하다.

즉, (I) 정관에 법인의 존속규정이 있어 그 기간이 다한 경우, (II) 지주들의 만장일치로, (III) 존속기간이 무한인 법인의 경우 지주 절대다수의 의결로, (IV) 지주가 1인만 존속하는 날로부터 180일 내에 복수의 지주가 되지 못하는 경우, (V) 법에서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등이다.

법정해산(dissolução judicial)에 관해서는 제1034조가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인은 다음의 경우에 아무 지주나 그 청산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즉, (I) 법인의 성립이 무효화된 경우와 (II) 법인의 존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주들은 정관에 다른 해산 원인을 합의해 놓을 수 있다(제1035조). 물론, 이러한 법인 해산에 대해 반대가 있는 경우 법적 확인 절차를 밟게 된다.

법인의 해산이 결정되면 해산 절차를 밟게 된

다. 경영인은 해산인(liquidante)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더 이상 새로운 사업을 벌여서도 안 되고 기존에 벌여놓은 사업의 정리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새로운 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무한한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제1036조).

법인의 해산이 완료되면 지주는 바로 법적 청산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 즉 임의청산은 인정되지 않으며 엄격한 법적청산(liquidação)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관에 청산인(liquidante)을 지정해 놓지 않은 경우 지주심의를 통해 청산인을 선정하게 되는데, 법인의 경영인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가능하다(제1038조). 청산인은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다.

제1104조에 따르면 청산인의 의무와 책임은 청산중 법인경영인의 경우에 준해 취급된다. 제1103조는 청산인의 의무를 열거해 놓고 있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I) 청산인은 법인해산(dissolução da sociedade)의 의사록, 판결문 또는 해산관련문서를 확인하고 공개해야 한다. (II) 청산인은 법인의 모든 자산과 장부와 서류를 수집해야 한다. (III) 청산인에 취임한 후 15일 내에 경영인의 조력을 받아서 법인의 재고와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IV) 법인의 사업을 종료하고, 채권을 확보하고 채무를 변제하며, 잔여자산을 지주 간에 분배한다. (V) 법인 채무변제에 자산이 부족한 경우 미납지주에게 자본완납을 요구하며, 해당되는 경우에 지주들에게 미납자본의 납입 또는 법인채무를 분담할 것을 요구한다. (VI) 매 6개월마다 지주

총회를 소집하여 청산 상황을 보고한다. (VII) 청산중의 법인의 형태와 상황에 따라 법인의 파산을 인정하고 법정관리를 요구한다. (VIII) 청산이 완료되면 지주들에게 청산보고서와 최종정산을 보고한다. (IX) 청산 종료를 최종 확인하는 지주회의록, 총회회의록 또는 관련문서를 확인한다. (X) 법인을 대표하여 자산의 처분, 채권과 채무의 정산 등 청산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수행한다.

우선순위 채권자의 권리에 대해 청산인은 도래된 채무와 도래할 채무를 구분하지 않고(후자에 대해서는 할인을 적용) 비례적으로 지불한다(제1106조). 자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청산인은 개인책임 아래 만기채무를 모두 변제한다. 지주들은 투표를 통해 청산 전, 그러나 채권자에 대한 변제 후에, 법인의 자산이 밝혀질 때마다 잔여자산의 배분을 앞당길 수 있다(제1107조). 청산이 종료되었으나 불만족한 채권자는 지주들을 상대로 지주가 배분받은 잔여재산에 한해 개별적으로 채권변제를 요구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청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1110조).

법원청산(Liquidação Judicial)의 경우는 소송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법원청산 절차 중에 판사는 필요할 경우 지주회의나 총회 소집을 통해 청산에 관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12. 나가면서

브라질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유한책임회사(Ltda.)는 2002년 신민법전에 편입되면서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상법과 Ltda.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민법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민법원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브라질 민법은 계약에 대해 사회적 기능(social function) 원칙을 도입하여 모든 계약이 사회발전에 순기능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새로운 원칙을 세웠다. Ltda.도 이러한 새로운 계약원리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되었다. 계약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례를 통해 꾸준히 그 적용범위와 기준을 정해오고 있다.

Ltda.는 기본적으로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의 장점을 모았기 때문에 가족이민이 주류를 이룬 브라질 사회에 아주 잘 어울리는 기업 형태로 자리를 잡아왔다. 그러나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Ltda.를 둘러싼 법률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서 Ltda.의 경영과 관련하여 지주경영인과 투자지주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민법에 규정된 Ltda.에 관한 조문들은 이러한 사회적 고민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소액지주에 대한 보호나 지주들의 보충적 연대책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학설이나 판례의 입장도 이러한 신민법의 기본철학과 같은 방향이다. 특히, 노동자채권, 세무채권, 사회복지채권 등에 관해 지주들의 연대책임의 기준과 범위가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다.



맞춤형 법제정보

따라서 Ltda.의 형태로 브라질에 투자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은 단순히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조문을 형식적으로 파악해서는 안 되며, 관련 법과 판례의 동향을 파악하여 법조문의 새로운 해석과 적용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조 희 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